

농업인 부채대책위원회 활동 마감,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지난 4월 4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던 농업인 부채대책위원회(이하 부채대책위원회)가 활동의 막을 내렸다.

최근 농가부채위원회는 상호금융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에 대하여 농림부와 농민단체간 몇차례에 걸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복수안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부채대책위원회에서 참여위원들이 합의하여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기간별 금리를 차등화하여 농가의 선택권 보장
 - ① 5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1.5%
 - ② 4년 거치 11년 상환, 금리 1.0%
 - ③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0.5%
2. 경영회생지원제도는 금년부터 시범 도입된 제도로 부채 정상환이 곤란한 농가에 Work-out방식의 경영회생 프로그램 적용하는 제도임. 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를 상설화하고 기존 연리 4%, 3년 거치 5년 상환에 지원 규모를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2,000억원 규모 확대하기로 함
3. 농업경영개선자금 농림부(안)과 농민단체(안) 복수안 건의
 - ① 농림부(안) : 대부분 연체 등 상호금융자금을 저리 대체해준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타부문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고 상환기간을 5년간 연장해 준비 있으

므로 현행 유지

- ② 농민단체(안) :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민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가장 큰 농민들인 만큼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

4. 연대보증 피해자금 상환 기간 연장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상환기간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5.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농림부(안)과 농민단체(안) 복수안 건의

- ① 농림부(안) : 자금의 성격상 시장원리의 의해 운용되고 있는 상호금융금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유지
- ② 농림부(안) : 농가수익에 비해 금리가 높아, 이자부담과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금리를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고 이차 보전기간을 5년 연장

부채대책위원회는 올초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농림부장관 산하 자문기구로 농림부와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선공약에서 시행하기로 밝혔던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만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합의했을 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농업경영개선자금이나 상호금융 대체자금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부채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농가부채 실태조사와 한농연이 조사한 실태조사의 결과 농가부채 평균금액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큰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복수안으로 채택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이나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경우 농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연은 부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농민단체(안)들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